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힘든 고통은 아마도 출산의 고통일 것이다. 출산 이후에도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 사실이다.

보육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공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6일 젊은 맞벌이 부부의

## 믿었던 어린이집, 아이들 배 굶린다

백 현 석 / 우먼 타임즈 기자

육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보육종합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영아(1~3세의 젖먹이) 보육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영아전담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야간·휴일·24시간 등 시간 연장형 특수교육 서비스를 공단, 병원 중심지 등 수요 집중지역 중심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5인 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부가 개설하는 '가정보육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부여해 영아 보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별로 예산을 지원해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각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국 1,290개 국·공립 보육시설(2001년 기준)에서는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자신의 이익에만 이용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형식적인 관리에만 급급해 결국 애꿎은 부모와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은 사립 어린이집보다 저렴한 보육료와 시청이나, 구청 등 각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아이를 믿고 맡기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몇몇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간식이나 급식비를 유용하거나 현장 학습비 및 교사들의 수당까지 가로채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팔장만 끼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

결국 우리 부모들이 낸 세금과 보육료로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8일에는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평소 원아들의 급식비와 교사들의 연수비를 착복한 혐의가 구청감사에 적발돼 사표를 쓰고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7년 가까이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해 온 어린이집 원장은 한 업체로부터 급·간식 물품을 계속해서 거래하며, 백지 영수증으로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간식은 줄어들었고, 현장 실습비까지 착

## 『지자체 위탁 어린이집 원장들 아이들 급·간식비 유용 빈번』

## 『교사·학부모·주민 참여해 투명경영 확보해야』

복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문제는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지난 99년 관악구 의회가 관내 37개 구립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보고되기도 했다. 한 어린이집에서는 10원짜리 방울토마토 3개를 간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어떤 날은 떡볶이 2조각이 간식의 전부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의 강동구청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는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시설비, 부식비 등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모두 4,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최근에는 서대문구와 마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도 원장이 아동들의 명단을 이용해 불법지원을 받았고, 간식비용 등을 빼돌린 것이 적발되어 사표를 제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는 개인의 운영 미숙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자질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원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육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장을 맡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 보육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되도록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만 맡겨놓고, “잘 놓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마음가짐도 고쳐야 할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심사숙고(深思熟考)해 볼만 한다. ■■■■